

'29만원 호화 생활' 전두환 가족 출처불분명 재산 추징

'全·盧 추징금징수법' 내용은

국회가 5월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 책임자인 전두환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데는 "총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신고해놓고 호화 생활을 하는데도, 내야할 추징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특히 호화골프를 즐기고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가족들은 수백억대 재산가로 명명거리며 살고 있는데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재산은닉에 대한 의혹도 한몫을 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별법안'은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안 발의에는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재산 취득 소명 요구

소명 안되면 80% 추징

불법재산 아니라면

본인이 입증 책임져야

6월 18일 발의된 뒤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은 특정 고위공직자를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한정했다.

또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재산에 대해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이 안되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재산으로 간주된 가족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전·노 두 사람을 정면 겨냥한 법안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 배기운·김성근·서기호·윤후덕·김미희·문병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몰수대상재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외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인은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별도로 추진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무원범죄 예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된다. 하지만 관련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3주년 기념식을 앞둔 6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북구 여성단체회원들이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전면 개관해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 성명

“콘텐츠 종합계획 빨리 확정하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호)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15년 전면 개관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아시아문화전당은 53% 공정률로 2014년 준공, 2015년 개관

을 앞두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홀대나 다름없는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늘어지고 준공·개관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별위는 “2015년 개관을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당콘텐츠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관 완공도 시급하지만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해 콘텐츠 종합계획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특별위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 전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운영 등을 요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5·18과 전두환, 그리고 29만원



최근 '5·18민중항쟁 33주년 서울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청소년 공모전에서 그림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변수환 동원중 2학년 학생의 '기슴 속에 묻은, 사랑하는 오빠'.



작가 이하씨가 지난해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전시한 '웃기지마라&울리지마라' 전에 선보인 작품. 전두환씨가 수백을 천 채 29만원이라고 쓰인 수표를 들고 서 있다.

“全·盧 비자금 행방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 할 것”

김동철 의원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중인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안인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별법'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무려 10개월 동안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이른바 '전두환 특별법'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



에 전혀 진전이 없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뻔뻔한 일정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며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두환 특별법' 심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

- 전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추징금 공소 시효를 맞는다.

▲단돈 10원이라도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검찰이 지금껏 그렇게 공소 시효를 연장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 특별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이 불법 축재했을 개연성이 있는 가족 재산의 취득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명이 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추징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재산으로 간주된 재산은 가족들이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행방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 법안 통과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일단 법사위 등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안 통과를 호소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에도 법안 통과를 당분으로 해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여기에 동료 의원들과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작업도 생각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사회봉사단은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2012년 스톨다섯 가구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아들 보다 낫네!”

시골의 한 어르신들의 집.

지붕은 낡아 비가 새고, 방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집 수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이곳에 현대삼호중공업 사회봉사단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지붕과 방, 부엌, 화장실을 깨끗이 수리한 덕분에

이제 어르신은 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봉사단 회원들은 아들 보다 낫습니다.

어르신들의 집에 오늘 천사들이 왔다 같 듯 합니다.



빛의 만평

- 김종두



웃는 사람, 딱 한 사람 있군